

[민실위 특보] 축소 · 누락 · 은폐 3월 6일 뉴스데스크는 과연 무엇을 기록했는가

어김없이 외면한 특검 수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어제 99쪽에 이르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의 혐의가 담긴 사건의 목차는 다음과 같았다.

제 2장 주요 사건 수사 결과

- I.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
- II.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
- III.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 IV.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 V. 최순실 민관 인사 및 이권사업 개입 사건
- VI.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
- VII.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

제 3 장 의혹사항 조사 결과

- I.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형성 및 은닉 의혹
- II.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 관련 의혹

제 4 장 검찰 이관 사건

- I.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 II. 대통령 관련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 III.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위 사건
- IV.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7가지 주요한 사건에 얽힌 대통령의 혐의만 총 14가지였다. 연루된 인사도 방대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외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김종덕 전 문화부장관,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 안종범 전 수석 등 행정부의 최고 권력자들은 물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계 1위 삼성 그룹의 핵심 경영진, 최경희 전 총장 등 이화여대의 주요 교수들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뉴스데스크는 이 수사결과를 단 리포트 하나로 처리했다. 당연히 수사 결과도 제대로 전달이 될 수가 없었다.



① “뇌물죄 공범...블랙리스트에도 관여” (김태윤)

해당 기사에서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삼성의 합병 과정을 포함해 단 석 줄로 처리했다. 블랙리스트는 단 두 줄이었다. 세월호 7시간에는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문장과, 비선 진료 문장이 하나씩 추가됐다. 3장은 통틀어 단 세 문장이었다. 수사 결과 중 2장의 I, II, III, IV 와 3장 I, II, 4장의 I,II를 10개의 문장, 1분 36초로 요약한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과 정유라 입시 비리 등 검찰로 이관된 사건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② “짜맞추기 수사...특검은 태생적 위험” (김성민)

이 리포트의 뒤를 이은 것은 대통령의 해명이었다. 그런데 ①번 기사가 특검의 수사를 충실히 다루지 않고 부실하다보니 ①번에서 다루지도 않은 내용을 ②번에서 해명을 실어주는 기사의 기초 요건도 갖추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②번 기사 앞부분에는 ‘경제 공동체’가 터무니없는 의혹이라는 해명이 등장한다.

“우선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라는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①번 기사에서는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라는 설명이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경제 공동체'는 뇌물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검찰이 왜 경제 공동체로 판단했는지를 소개하고, 대통령 측이 왜 그 판단이 틀렸는지 반박하는 근거들을 제시하는 것이 시청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이다. 터무니없이 리포트를 축소하려다보니 손발이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다른 해명들도 근거는 없이 '부인했다', '그런 적이 없다'는 변호인의 입장을 단순 반복했다

대통령 수사 축소...그 자리를 채운 건 북한에 대한 추측성 부풀리기

대신 어제 아침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리포트가 9개나 나갔다. 북한이 4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과 미사일의 종류와 발사 의도를 추측하는 리포트가 나갔다. 뒤이어 미, 중, 일 3국의 반응을 각각 개별적으로 다뤘다.

북한을 다루는 보도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기서도 불거졌다. 근거가 없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분석과 추측이 등장한 것이다.



③ 연쇄 발사의 노림수...사드 약점 부각?

“한반도 서쪽 끝에서 동쪽을 향해 저각 발사한 것도 사실상의 신형 미사일 성능 시험 실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분석의 근거가 불분명



④ 한미 훈련에 반발...트럼프 '간 보기'? (김세진)

"(전략)...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 방향이 정리되는 8월쯤, 그동안 예고해온 신형 ICBM 도발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 관측의 주체를 제시하지 않음

소수의 전문가에 의존하는 한계도 드러났다. 모두 9개의 리포트가 나가는 동안 전문가 인터뷰는 2개에 불과했다

민실위는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가 어땠는지 분석해 보았다.

먼저 SBS는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해명을 포함해 6개의 리포트를 방송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내용 대부분을 다루면서 수사 발표의 배경은 기자가 출연해 분석했다. 수사 결과 3장, 의혹 부분에 나온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도 별도의 취재로 보충했다. 반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기사 3개를 리포트했다.

신문들은 다음 표와 같이 다뤘다.

언론사	1면 관련 기사 제목	특검 수사 기사 분량	北 미사일 기사 분량
경향신문	국정농단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 있었다	3면	2면
	북한, 22일 만에 탄도미사일 4발 동해상으로 발사		
동아일보	북, 스커드-ER 4발 쏘도... 중 "사드반대 불변"	3면	2면
	우병우 靑 입성 직후, 기업서 수억원 입금		
서울신문	"박 대통령, 미르·K재단 사업도 직접 지시"	3면	3면
	北 또 미사일 도발...美 "모든 능력 사용 준비"		
조선일보	북, 10분새 미사일 4발 쏘며 무력시위	1면	1면
	특검 "박 대통령, 삼성 뇌물 433억·블랙리스트 지시 혐의"		
중앙일보	보란 듯이 썼다, 김정은의 도박	2면	2/3면
한겨레	특검, '박대통령 헌법 위반 중대범죄' 결론	4면	1면
	22일만에 또... 미사일 4발 쏜 북한		
한국일보	"국정농단 몸통은 박 대통령"	4면	2면
	北, 미사일 4발 도발... 트럼프와 '강 대 강' 기사움		

언론사 대부분이 특검 수사 결과와 대통령의 해명 전반을 소개했다. 분석 결과 MBC처럼 북한 미사일 발사 기사의 비중이 압도적인 곳은 없었다.

MBC와 KBS의 판박이 큐시트

그러나 단 한 곳은 예외였다. 그 언론사는 MBC와 더불어 양대 공영방송인 KBS였다.

KBS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7개의 기사를 리포트했다. 스트레이트 기사, 미사일의 종류와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는 기사, 중국과 일본 등 각국의 반응을 전달하는 기사 등 전체적인 구성이 뉴스데스크와 흡사했다.

특검과 관련해서도 수사 결과와 대통령의 해명을 각각 하나씩 리포트하며 MBC와 판박이 같은 모습을 보였다.

민실위원들은 "박근혜 정권에 장악된 양대 공영 방송사만 비슷한 편집을 보여준다는 것은 유무형의 보도지침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두 공영방송사의 메인 뉴스는 모두 특검 수사 같은 방대한 내용을 하나의 기사로 축약해 근거를 누락하고 짧은 문장으로 혐의를 소개했다. 대통령의 반박 역시 혐의와 대구를 이루는 짧은 문장으로 제시했다. 특검과 대통령 중 어느 쪽이 확실한 증거와 근거를 갖고 있는지는 희석시키고, 마치 명확하지 않은 실체에 대해 서로 공방을 벌이는 인상을 줬다. 그리고 정보가 부족한 북한의 무력 시위와 관련한 뉴스의 양을 추측과 분석으로 늘렸다. 특검에 쏠린 시청자들의 관심을 북풍으로 돌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실위원들이 주목한 또다른 부분은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검찰로 이관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를 빼놓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언론사	기사 제목
경향신문	검사 31명 '2기 특수분' 출범...우병우 전담팀 꾸려
동아일보	우병우 靑 입성 직후, 기업서 수억원 입금
조선일보	검찰, 우병우 전담 수사팀 꾸려
중앙일보	2기 특수분, 우병우 가족회사도 수사 계획
한국일보	국정농단 현장엔 짙은 '우병우 그림자'
한겨레	"안중범은 돈 받아내고 우병우는 말 안듣는 공무원 매질"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과 검찰 주요 인사 간의 수상한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검찰과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었다. 넘겨받은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 비위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2부에 배당했다. 우 전 수석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부서에 배당해 수사의회에 관한 뒷말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우병우 전 수석 의혹은 향후 사건 수사의 중요한 과제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의 통화 내역이 보도된 이후 유독 MBC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취재 능력이 없는 것인지, 고영태 녹취록만큼 취재 의지가 없는 것인지 여러 모로 납득이 되지 않는 자세이다.

20일의 준비기간과 70일의 공식 수사 기간.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만 특검 사상 최다인 30명에 이르고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 재벌들이 포함된 사상 초유의 사건. 그런데 3월 6일 뉴스데스크는 그 결과를 단 1분 36초로 처리했다. 경과와 배경, 분석, 전망 등 그 어떤 심층 보도도 이날 등장하지 않았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4발, 9쪽지의 리포트였다. 중요한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저널리즘의 기본을 망각하고 뉴스데스크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린 행태이다.